

‘당대표 연임 도전’ 민주 정청래 전 대표, 전북 현안 입장 밝혀

“새만금·AI·현대차 투자사업 차질 없이”

전북 당원들에 지지 호소
“AI·반도체, 핵심 의제”
당내 갈등에 “대토론회 열고
갈등 풀어내는 방안 검토”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민주당 전 대표)가 전북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과 AI, 현대자동차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성운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후보로서 자신의 구상과 전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완산구 청소년들과 함께 새벽 청소년 현장을 체험했다며 “꼭꼭 속에서 일하는 도민들의 노고를 직접 느꼈다”며 “무더운 날씨에 모든 도민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 완주이고 외갓집도 전북”이라며 “10남매 중 막내인데 아홉 번째까지는 전북 금산 출생이고 저 혼자만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하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전북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의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새만금 현대차 투자사업과 관련해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공장, 수소·AI 시범도시 등을 거론하며 총 9조원 규모의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여러 입법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안에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 특별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사업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관련 법률 등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법, 지역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수소철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차량 개발·보급 촉진법, 혁신건축·융복합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여러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곧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의 기조는 클린 선거”라며 “캠프 없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힐끔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반명’, ‘신천지’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명이 없다”며 “160만 당원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을 친명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그냥 통합하자고 해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원들이

왜 서로 반목하고 오해했는지 아픈 부분을 먼저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을 열어 갈등을 풀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낙선자는 승복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이 한 명이라도 내리꽂아 전락 공천한 적은 없다”며 “모두 경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는 만큼 감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과 ‘1인 1표’ 원칙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 후보는 “당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성과는 단연 1인 1표”라며 “국민 주권사이에 이어 당원 주권사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1인 1표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하나로 결집하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및 통합을 통해 향후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개혁과 민생을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개혁

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전북도민들이 자신을 당대표로 맡겨주신다면 새만금과 AI를 비롯한 전북의 미래산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신속한 제명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 질문에 정 후보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박근혜 윤리감찰단장이 김 지사로부터 서면 소명서를 받아와 자신이 꼼꼼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당시에는 전국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당 대표로서 현금 살포가 언론에 명확히 보도되어 야당에게 공격의 발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는 당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이 발생하지만 당 대표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결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민주 최고위원 후보들, 전북 방문 잇따라

박선원 “전북 2·3차 메가프로젝트 확보”



“이 대통령과 호흡 맞출 것”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크게 크게 가다 보니 빠진 데가 있고 앞으로 2차·3차로 계속 투자계획이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박 후보는 전했다.

박 후보는 특히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실제 현금이 집행되는 투자계획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현재 구상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대통령께서는 전북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켜온 전북 도민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그렇게 많이 찍어주는데 받은 게 뭐가 있느냐며 차라리 국민의힘을 찍으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정의를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민주당을 찍고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준 만큼 그에 따른 성과와 보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반도체 후공정과 피지컬 AI, 로봇 산업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전북은 지리적으로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남을 연결하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반도체 산업 역시 청주를 넘어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만큼 전북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과 전북의 현안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새만금 사업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투자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군산 어청도 해상풍력 등 국방과 연관된 현안도 국방위원으로서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김용 “당·정 일치로 개혁·민생 책임져야”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회 의원에 참석해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탤다.

김 후보는 자신을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고자”라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김용”이라고 소개하며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이 돼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의 민주주의 역사를 강조하며 호남 당원들의 역할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현재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정 분리’ 주장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과 정부를 갈라놓는 당정 분리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고립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 당정 분리에 대해 ‘대통령이 실패하면 당은 책임이 없느냐’고 통탄했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었던 참담한 비극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 개혁과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호남정치 복원, 서울서 이기는 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 송영길 전 대표 전주서 당대표 출범식… 지지 호소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전주를 찾아 당원과 지지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끌겠다”며 전북 당원들의 지지를 강하게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 치명자 성지 평화의 전당 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범식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호남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수도권 선거 경쟁력을 앞세워 당 대표 선거에서의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송 후보는 최근 호남 정치권을 둘러싼 ‘호남 소외론’을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호남의 아들이 타지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호남의 부모와 형제의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광주에서, 전남에서, 전북에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에서도 저 송영길을 앞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호남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강조하며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도 부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전주 치명자성지 평화의 전당 홀에서 당대표 출범식을 열고 전북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만든 호남 정치를 다시 복원해 호남의 미래와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유일한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서울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송 후보는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을 이용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 대통령을 파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당내 일부 정치권을 겨

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사골처럼 우려먹는 말뿐인 개혁과 자기 장사만 하는 사이 이재명 정부가 망가진다”며 “여당이든 여당답게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

공을 위해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검증된 행정 능력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송 후보는 “윤석열 정권 3년의 탄압과 329일의 투옥을 견디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 무죄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려낸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실력, 정답은 송영길”이라며 “서울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의 투표 방식인 선호투표제도 적극 활용했다. 송 후보는 “이번 선거는 선호투표제”라며 “좋아하는 순서대로 1등, 2등, 3등을 매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대중의 선택, 노무현의 동행, 문재인과의 선행, 이재명의 동지로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해 온 기호 1번 송영길”이라며 “호남의 아들을 다시 세워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송 후보의 이날 전주 출범식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당원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세굴기로 해석된다. /오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복지부 방문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 전체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일 남원시의회, 남원시에해한동등분부, 국립의전원유치

남원시민연대가 공동 연석회의와 결의대회를 통해 발표한 성명 내용을 정부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달된 성명서에는 △수도권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 규탄 △지역 중심의 국가공공의료 정책 전환 요구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한 ‘국가공공의료 거점’의 남원 조속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원=김기두기자